

양적 조정에 치중했던 대학평가, '맞춤형 진단사업'으로 바뀐다

6단계 등급 구분 3단계로 간소화...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대학 40%로 축소

일시 : 2017년 11월 30일

신문사 : 공감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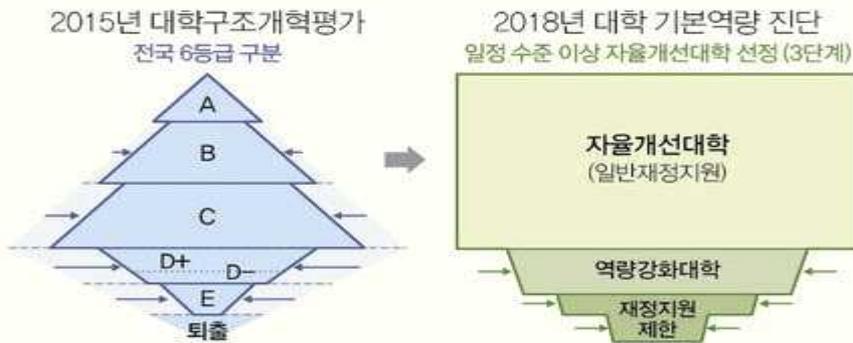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 개선안을 내놨다. 사진은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사업에 반대하는 집회 모습.

[공감신문] 교육부가 30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계획'과 '대학 재정사업 개편 방향' 시안을 발표했다. 그간 대학평가가 재정 지원을 조건으로 정원 감축 등 양적 조정에만 치중해왔다는 비판을 받음에 따라 '대학별 맞춤형 진단사업'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우선 전국 대학 등급 구분이 간소화된다. 기존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기존 A~C, D+, D-, E의 6단계로 구분했다. 앞으로는 권역별 진단을 거쳐 3단계로 간소화될 예정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 개편 시안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급별 조치

자율개선대학	(60% 안팎)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육성하여 지방·수도권 상생의 선순환 체계 조성 일반재정 지원 → 질 높은 지역대학 육성 → 지역인재 육성 지역인재 정착 → 균형 발전
역량강화대학	(20%) 적정 규모화 유도 및 특수 목적사업 참여로 특화 발전 지원
재정지원제한	(20%) I 운영 효율화 추진 및 기본 역량 제고 II 강도 높은 구조조정

자료/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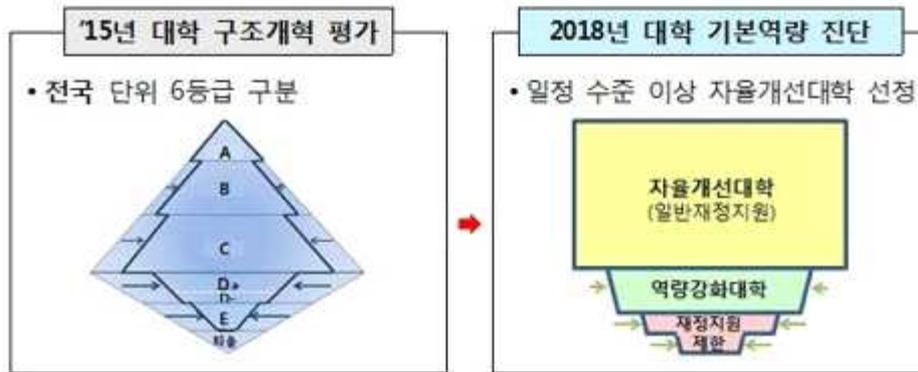
연합뉴스

대학평가 6등급→3등급 단순화

1단계 기본요소 진단을 거쳐 일정 수준 이상 대학은 자율개선대학(60% 내외)으로 선정하고, 2단계 지속가능성 진단을 통해 나머지 대학을 역량강화 대학과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분류하게 된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학교는 사용처의 제한 없이 자율적 집행이 허용되는 일반재정이 지원된다. 또 정원 감축 권고도 하지 않는다.

역량강화대학(20%)에는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특수목적 지원사업 참여도 허용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20%)으로 지정된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가 내려지며 정부 재정지원에 차등 제한을 받는다.



재정지원제한 대학 중 '유형I' 대학에 기존 지원은 계속하되, 신규 지원과 신청은 제한한다. 또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II유형) 지원 제한, 신·편입생 일반 학자금 대출 50%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최하위인 유형II 대학의 경우 재정지원 전면 제한,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I·II유형 100% 제한, 신·편입생 일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100% 제한 등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의 정원 감축 권고 규모는 2만 명 이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제재를 전혀 받지 않는 A등급의 비율이 16%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기본역량 진단에서는 이와 유사한 개념인 자율개선대학 비율이 60% 안팎이 될 것이라 밝혔다.

이 경우 정원 감축, 재정사업 지원 제한을 받는 대학은 전체의 84%에서 40%대로 감소하게 된다.

교육부는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고 자율개선대학을 선정, 질 높은 지역대학을 육성할 계획이다.

권역은 일반대는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분류된다. 전문대는 강원·충청권, 대구·경북권 이외 다른 권역은 일반대와 동일하게 분류된다.

2018년 진단에 따른 지원·육성 방향



기본역량진단 등급별 조치

이밖에 1·2단계 진단을 종합한 결과 역량강화 및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일부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대학별 평가팀 운영 방식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표별 진단팀으로 바꾼다. 기존의 구조개혁평가에서는 1개팀(9명)이 10개 대학의 모든 지표를 평가했다. 2018년 진단에서는 40명의 평가위원이 그룹 내 모든 대학의 담당지표만을 진단하게 된다.

【 정부 재정지원 제한 범위(안) 】

등급	정부 재정지원 사업 (특수 목적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I유형	II유형	일반	취업 후 상환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 I	(기존) 지원 지속 (신규) 신청 및 지원 제한	-	신·편입생 지원제한	신·편입생 50%제한	-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 II	(기존) 지원 제한 (신규) 신청 및 지원 제한	신·편입생 100% 제한		신·편입생 100% 제한	

최하위 대학으로 평가받는 대학 중 2015년 최하위 등급, 기관평가 불인증, 부정·비리로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 학생 충원율이 현저하게 낮은 대학 등은 '한계대학'으로 선정한다. 이들 대학이 정상화 불가 판단을 받으면 폐교도 검토할 수 있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지원 사업으로 단순화한다. 대학의 자율적 혁신 지원과 기본역량 향상을 위해, '자율협약형 대학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별도의 평가 없이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특수목적지원사업은 교육, 산학협력(LINC), 연구(BK) 사업을 중심으로 통폐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안에 대한 대학현장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2월 중으로 이를 확정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진단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대학평가' 개편에 지방대들 "도움될 것" vs "도움되겠나"

일시 : 2017년 11월 30일

신문사 : 연합뉴스

대체로 '지방대에 유리' 평가...일부선 추가 개선책도 요구

(전국종합=연합뉴스) 교육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과 '대학 재정사업 개편 방향' 시안에 대해 지방대학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지방대학은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일부 대학은 "학령인구 급감 등 상황에서 평가 방법만 바뀐다고 대학 운영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대학구조 개혁 방향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7.11.30 hkmpooh@yna.co.kr

광주대학교 관계자는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 방법은 권역별이 아닌 전국의 일반대학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평가하다 보니 지방대학이 수도권 대학보다 여러 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권역별로 나눠 평가하면 지방대에 다소 유리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일반재정지원과 연계한 평가 역시 대학으로서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조선대 측도 "그동안 수도권에 유리하게 돼 있던 평가 방법을 권역별로 바꿔 지방대학 사정을 어느 정도 반영해 준 것 같다"라며 "특히 자율개선대학의 폭을 넓혀준 것은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불리한 상황이었던 지방대학에 고무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부산대 관계자 역시 "그동안 서울 등 수도권 대학과 통틀어서 평가가 이뤄지다 보니 지방대에 대한 평가는 심각했다. 이제는 권역별로 평가된다고 하니 지방대학들이 조금 숨은 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라는 직격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 대학평가 기준이 지방대학 운영에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았다.

경기도의 한 대학 관계자는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두고 지방대학에 대한 '차별'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 이번 개편으로 대학들 생존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거라고 본다"라면서도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인상 불가 방침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퇴출당해야 하는 부실 대학교가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부 대학은 교육부 대학평가 새 시안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거나 추가로 개선할 부분을 제시하기도 했다.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지역거점국립대학 중 유일하게 하위등급을 받았던 강원대학교 측은 "공식으로 내려온 평가 지침이 없어 내달 1일 교육부의 설명회에서 자세히 들여보아야 할 것 같다"라며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방법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남지역 총장협의회 수석 회장 박노권 목원대 총장은 "자율개선대학 선정 비율이 1차와 2차 포함 60%+ α 로 알려졌는데 이보다 많은 75% 이상 수준까지 확대해달라고 총장협의회 이름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에 "지난 경험으로 볼 때 2차 평가를 준비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만큼 1차 평가에서 모두 선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영호 배재대 총장도 "대학들의 권역별 수준이 달라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대학은 1단계부터 자율개선 대학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재정 지원을 조건으로 정원 감축 등 양적 조정에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학별 맞춤형 진단 사업으로 바꾸고, 전국 대학을 6단계로 세분화했던 등급 구분을 권역별 진단을 거쳐 3단계로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과 '대학 재정사업 개편 방향'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 시안을 대학현장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2월 중 확정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진단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영서, 김재선, 김준호, 한무선, 차근호, 류수현 기자)you@yna.co.kr

정원감축 '하위 40% 대학' 어떻게 정하나?

일시 : 2017년 11월 30일

신문사 : newsis

대학기본역량 진단 지표 및 배점(안) - 일반대



진단 항목	배점	진단 지표	비고	2016년 비교			
				단계	배점		
1 단계	2	발전 계획 및 성과 (2)	정량적 정성 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발전계획의 수립·추진·성과	규모 고려	2 →1단계	15	
	10	교육 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21)	정량/정량적 정성 전임교원 확보율	국·공립/사립/국립대법인		8	
	-		정년/비정년 전임교원 운영 현황	실태조사			
	3		정량 교사 확보율	국·공립/사립/국립대법인		5	
	5		정량 교육비 환원율	국·공립/사립/국립대법인		5	
	2		정량/정량적 정성 법인 책무성 정량 법인 책무성 실적(1) 정량적 정성 법인 책무성 확보 계획(1)	사립 계획·실적 진단	신규	-	
	1		정량적 정성 구성원 참여·소통 (법령상 의무사항)	국·공립/사립/국립대법인 계획 진단	신규	-	
	10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20)	정량적 정성 교육과정·강의 개선 정량적 정성 교양 교육과정(3) 정량적 정성 전공 교육과정(4) 정량적 정성 강의개선(3)	규모 고려	2 →1단계	10
	10			정량/정량적 정성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정량 강의 규모의 적정성(1) 정량 시간강사 보수수준(1) 정량적 정성 수업관리의 적정성 및 운영성과(4) 정량적 정성 학생평가의 적정성 및 운영성과(4)	국·공립/사립/국립대법인 규모 고려		12
	5		학생 지원(16)	정량적 정성 학생 학습역량 지원	규모 고려		5
	3			정량적 정성 진로·심리 상담 지원	규모 고려		3
	5			정량 장학금 지원	규모 고려		5
	3			정량적 정성 취·창업 지원	규모 고려		2
10		교육 성과(16)	정량 학생 충원율 신입생 충원율(4) 재학생 충원율(6)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8	
4			정량 졸업생 취업률 졸업생 취업률(2) 유지취업률(2)	계열/성별/ 지역 구분		5	
2			정량적 정성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규모 고려		2	
소계	75						
2 단계	5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11)	정량적 정성 교양 교육과정(핵심역량 제고)	규모 고려		5	
	6		정량적 정성 전공 교육과정(전공능력 배양)	규모 고려		5	
	5	지역사회 협력·기여 (5)	정량적 정성 지역 사회 협력·기여	규모 고려	신규	-	
	5	대학 운영의 건전성 (9)	정량적 정성 구성원 참여·소통(제도·절차, 실적 등)		신규		
	4		정량적 정성/정량 재정·회계의 안정성 정량 재원의 적정성(1) 정량 재정의 건전성(2) 정량적 정성 재정·회계 관리체계 운영(1)	사립	신규	-	
소계	25						
총 계	100						

자료: 교육부 대학정책실
17.11.30 뉴시스 그래픽: 전진우 기자 618ue@newsis.com

NEWSIS

【서울=뉴시스】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Ⅱ 중 일부 '한계대학' 선정 방침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대학 구조조정 강화 방안으로 40%의 대학의 정원 감축을 권고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해당 대학 선정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교육부는 전체 대학중 하위 40% 내외 대학의 정원을 2019년 2만명 이내로 줄이도록 권고하는 방안이 포함된 '2018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대학구조개혁평가)'를 발표했다.

정부는 전체 대학중 우수한 축에 속하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상위 60% 내외 대학에 대해서는 2019년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부예산인 일반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원 감축 권고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반면 하위 40% 내외에 해당하는 역량강화대학(20%)과 재정지원제한대학(20%)은 정원 감축 권고 대상이다. 정원 감축 권고량은 2만명 이내로 계획돼 있다. 다만 진단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 권고를 할 예정이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다시 유형 I 과 유형 II로 분류한다.

유형 I 대학의 경우 기존 지원은 계속하되 신규 지원과 신청은 제한하며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일부 유형만) 지원 제한, 신·편입생 일반 학자금 대출 50% 제한이 이뤄진다.

최하위인 유형 II 대학은 재정지원 전면 제한과 더불어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I·II 유형 100% 제한, 신·편입생 일반 및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100% 제한이 이뤄진다.

진단방식은 대학이 반드시 갖춰야할 기본 요소를 중심으로 진단이 이뤄진다. 진단은 1단계와 2단계로 이뤄지며 기본적으로 일반대와 전문대를 구분한다.

일반대의 경우 1단계 진단은 총 75점이 만점으로 ▲지표로 발전 계획 및 성과(2점) ▲교육 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21점)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20점) ▲학생 지원(16점) ▲교육 성과(16점) 등으로 이뤄진다.

전문대는 ▲발전 계획 및 성과(6점) ▲교육 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15점) ▲학사 운영(10점) ▲산학 협력(8점) ▲학생 지원(17점) ▲교육 성과(19점) 등으로 배점이 이뤄진다.

1단계 진단 결과 상위 60% 내외 대학은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된다. 권역별 균형도 고려한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1단계에서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된 곳을 제외하고 하위 40% 안팎의 대학에 대해선 2단계 진단이 실시된다.

2단계 진단에서는 일반대의 경우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11점) ▲지역사회 협력·기여(5점) ▲대학 운영의 건전성(9점) 등 25점을 총점으로 평가하게 된다.

전문대의 경우 2단계 진단은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12점) ▲지역사회 협력·기여(3점) ▲대학 운영의 건전성(10점) 등의 배점으로 구성된다.

또한 부정·비리 대학에 대해서는 감점이 주어진다. 2015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행·재정 제재와 감사 처분을 받은 것이 대상이다.

특히 교육부는 진단 결과 최하위 등급은 유형Ⅱ대학중 대교협·전대협에서 시행하는 기관평가 인증에서 불인증 받은 대학, 부정·비리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 학생 총원율(신입생 총원율, 재학생 총원율)이 현저하게 낮은 대학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계대학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후 대학별 컨설팅을 실시해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 폐쇄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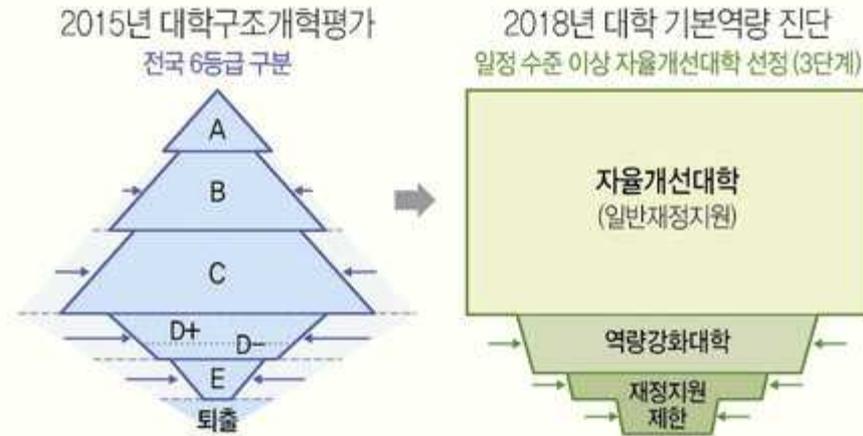
강세훈 기자 kangse@newsis.com

대학평가 개선 '자율성'에 방점...!돈으로 길들이기' 사라질까

일시 : 2017년 11월 30일

신문사 : 연합뉴스

대학구조개혁평가 개편 시안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급별 조치

자율개선대학	(60% 안팎)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육성하여 지방·수도권 상생의 선순환 체계 조성 일반재정 지원 → 질 높은 지역대학 육성 → 지역인재 육성 지역인재 정착 → 균형 발전
역량강화대학	(20%) 적정 규모화 유도 및 특수 목적 사업 참여로 특화 발전 지원
재정지원제한	(20%) I 운영 효율화 추진 및 기본 역량 제고 II 강도 높은 구조조정

자료/교육부

연합뉴스

이재운 기자 / 20171130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vn1



[그래픽] 대학평가 6→3등급 단순화

서열화·지역소외 부작용 제동...부정·비리 대학은 강력 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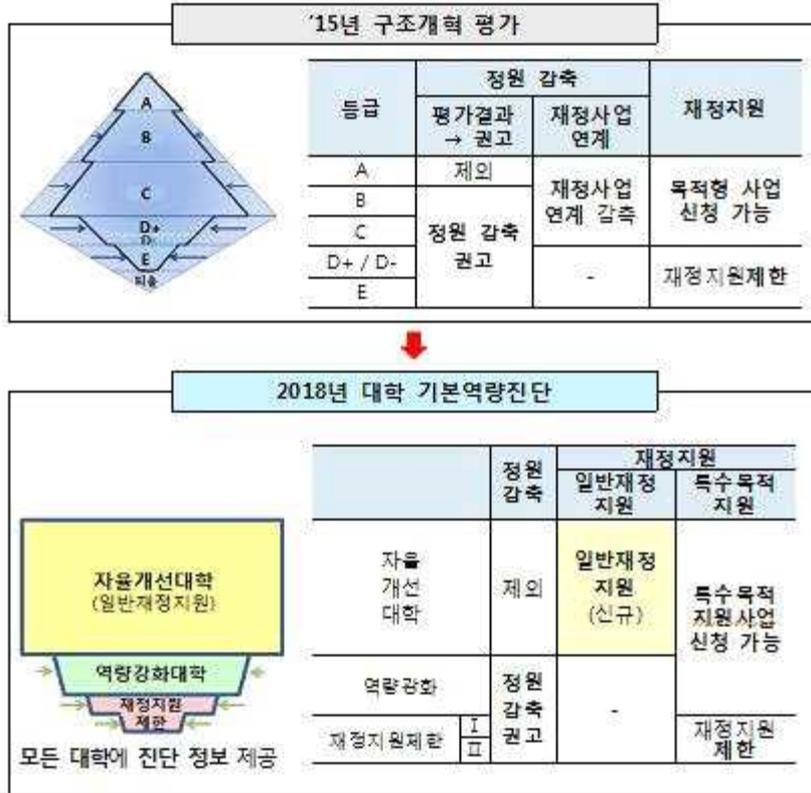
대학구조개혁 풍자 퍼포먼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교육부가 30일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진단과 재정사업 개편안은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 자율성을 무시하고 철저히 정부 입장에서 추진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모든 과정이 정부 주도로 이뤄져 자율성이 침해되고 시장주의 사업 방식으로 흐르면서 대학 서열화, 지역대학 소외, 정원 감축 압박 등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실제 지원은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이름부터 '기본역량 진단'으로 바꾸고 진단과 재정지원 방식을 맞춤형, 상향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계기로 고등교육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대학 체질 개선을 통해 국립대와 강소대학 육성, 공영형 사립대 도입, 사학비리 근절에 힘을 쏟기로 했다.

【진단 결과 활용(요약)】



구조개혁평가와 기본역량진단 비교

◇ '불이익 대학' 절반으로... "지역배려·공정성 제고"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돈으로 대학을 줄 세우고 길들인다'는 비판을 수용해 각종 제재를 받는 학교 수를 크게 줄인 점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6개 등급 가운데 A등급(16%)만 제외하고 모두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을 받았지만, 기본역량진단에서는 60% 안팎에 달하는 자율개선대학에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

역량강화 또는 재정지원제한 판정을 받은 대학 가운데 희망학교에는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된다.

학령인구 급감 등에 대비해 2023년까지 대학 정원 16만명 감축을 목표로 도입된 대학구조개혁평가는 A등급 외에 모든 대학에 정원 감축 권고가, D·E등급 대학에는 재정지원 차등 제한이 이뤄졌다.

기본역량진단은 평가지표도 달라졌다.

2018년 진단에서는 대학의 준비와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2015년 평가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국정과제 추진 방향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일부 지표를 개선했다.

대학 운영의 민주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모든 대학(일반대·전문대)을 대상으로 구성원 참여와 소통 계획을 진단한다. 일반대의 경우 법인전입금이나 법정부담금 점검을 통해 법인의 책무성도 지표로 삼는다.

교원 일자리 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전임교원에 대한 보수가 일정 수준(일반대 3천99만원, 전문대 2천470만원) 이하일 경우 감점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간강사 보수 수준의 만점기준도 높였다.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은 강화하되 대학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강의 규모의 적절성 기준을 조정했다.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려고 비정년 트랙 저보수 전임교원을 지나치게 많이 임용하는 부작용을 감안해 정년·비정년 전임교원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부정·비리 대학에는 감점, 등급 하향 등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

종교계와 예체능 계열, 편제완성 후 2년이 안 된 대학, 통폐합 신청 대학 등은 진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역량진단과 그 결과에 따른 재정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칭) 대학 혁신을 위한 대학 진단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대학 폐교 시 교직원 보호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도 추진된다.



※ 전문대학은 고등직업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개편(안) 마련

재정사업 구조 단순화 개념도

◇ '사업선정 목매기' 부작용 없앤다..재정지원 구조 단순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개편과 함께 재정지원사업도 개선된다.

약 1조5천억원(2017년 기준) 규모에 달하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지원 목적에 따라 다양한 사업으로 쪼개

져 지원됐다.

여러 개의 사업에 선정되려고 개별 사업에 얽매이다 보니 오히려 대학의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지원 방식을 목표부터 성과 관리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상향식 지원으로 전환한다.

대학이 세운 하나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각 사업 평가에 공동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사업 간 충돌이나 중복을 막고 불필요한 소모전도 없애기로 했다.

또 사업과 무관한 가산점 부여를 비롯한 정책유도 지표를 폐지하고 자율성 보장과 책임성 담보를 위해 '선 자율 후 책임'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지원사업 구조를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단순화해 일반재정지원은 자율개선대학 전체에, 특수목적지원은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에만 신청자격을 주기로 했다.

또 국립대학 고유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해 별도의 '국립대학 육성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기본역량진단과 재정지원 사업 개편이 고등교육정책이 유기적,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와 대학 간 협력으로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

대학 강사법 또 유예되나..대학들 '폐기' 건의

일시 : 2017년 11월 30일

신문사 : 이데일리

대교협 "시간강사 실직 늘 것" 정부·국회에 폐기 건의
강사 처우개선 위해 2011년 제정, 법시행 3차례 유예
올 초 마련한 보완강사법도 대학·강사단체 모두 반발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비정규직 교수 처우 개선 집회를 갖고 있다.(사진=뉴스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법제화가 추진 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대학과 시간강사들에게 모두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폐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국 4년제 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교육부와 국회에 '강사법 폐기'를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개정(보완)된 강사법은 시간강사에게 '교원' 신분을 부여한 게 골자다. 현행법에서 대학 교원은 교수·부교수·조교수로 구분되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강사'를 추가했다. 또 강사의 임용(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 퇴직토록 했다. 대학은 계약기간만 채우면 '해고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강사와의 계약을 자동 해지할 수 있다.

강사들은 이에 1년짜리 비정규직 양산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대학은 1~2년짜리 계약직 교원을 뽑아 쓰고 기간이 지나면 해고하면 그만"이라고 비판했다.

대학들도 '1년 이상' 계약을 의무화한 강사법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강사에게 1년 이상의 고용을 보장해야 하므로 대학은 전임교원의 강의시수를 늘리고 강사 채용을 최소화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오히려 강사들의 강의 기회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대학이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개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교협 관계자는 "강사가 담당 가능한 교과목 중심으로 대학의 교육과정이 편성되기 때문에 경직성이 증가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교육여건이 악화되면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고 서정민 박사의 죽음을 계기로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들어졌다. 2011년 12월 국회에서 의결됐으나 강사들의 반발이 워낙 커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세 차례 유예됐다. 2015년 12월에는 국회에서 교육부에 보완을 요구했고 교육부는 지난 1월 지금의 '보완 강사법'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학·시간강사 모두 반대가 커 강사법 시행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강사법 보완을 위해 노력했지만 대학, 시간강사 등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웠다"며 "교육부도 국회에 강사법 시행 폐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신하영 기자